

4.13총선 공약 키워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 각 정당의 건설·부동산 공약 점검, 지역균형 개발 전략 봇물 —

한형용 | 건설경제 정경부 기자

정당별 20대 총선 공약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주거 안정 중심으로 짜이고 있다. 저성장·저금리·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를 헤쳐가기 위한 해법으로 ‘청년 실업·고령화’ 문제 개선을 핵심 고리로 잡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 희망을 포기한 2030세대의 현실을 고려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방안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실버 공약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대신 지역별 예비 후

보의 공약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등과 맞물린 지역 균형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헛공약·재탕 공약 등이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를 당 차원에서 정비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주거 안정 중심의 ‘청년 공약’

여야 정치권 모두 20대 총선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새누리당은 고용 확대를 기조로 하는 ‘일자리 중심 성장론’을, 더불어민주당은 민

생 복지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성장론’을 내걸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각각 ‘공정 성장론’, ‘정의로운 경제론’을 강조한 총선 기조를 밝혔다. 분배와 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전략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증가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역시 분배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목표로 노동 개혁 4법을 기반으로 한 15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10~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의 창업·취업 크레딧 추가 지원도 있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로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시도별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해양 레저 인프라 구축 및 K-POP 전문 공연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000개와 민간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한시적 도입해 25만 2,000개,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 8,000개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구직 수당도 약속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해 2~4개 방을 갖춘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개선책과 함께 신혼부부용 소형 주택 5만호 이상 확대 공급 및 주거 지원 대출 요건 완화도 제시했다.

국민의당 역시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کم백흡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특별법'을 마련

해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임대 조건으로 정부 정책 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도 2020년까지 월급 300만원 시대를 개척하는 동시에 청년 임대 및 공공 임대주택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청년 표심 확보에 나선 상태다.

복지·소득 보전 중심의 '실버 공약'

60대 이상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할 공약 방향도 '지역 개발'에서 '복지'와 '소득 보전'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실버산업을 육성해 중장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비를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인대학육성법'을 마련해 노인대학의 숫자와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재교육과 취업 알선, 그리고 사회적 노하우 전수의 허브(hub)를 구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단 산하에 '실버공약팀'을 설치한 데 이어 김종인 대표의 '노인 공약 집중 개발' 지시가 이뤄지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당도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며 일자리와 의료비 경감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의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10~20% 해당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0조원의 공공복지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실버세대를 위해 은퇴 후 임대용 빌딩 투자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조치가 공약화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지역 예비 후보별 개발 공약도 봇물

당 지도부가 청년·노인 중심의 공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역별 후보자들은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 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 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개발 공약은 봇물이 터졌다. 철도 공약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만큼 선거구 확정,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시됐다.

주요 공약에는 △영서와 영동을 잇는 춘천~속초선 건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이천~충주는 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사업 등이 있다. 여기에 구축 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16조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목포~제주 해저터널 등의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청주공항과 보은 속리산을 연결하는 관광철도 건설, 인천대공원과 논현지구,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 등의 공약도 있다.

도심재생 분야에서도 20년 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대구수목원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공약부터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지를 활용해 동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금호강 수변 개발을 적극 추진해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방안도 쏟아지고 있다.

천성산 개발 프로젝트(안), 지리산 케이블카 건립 재추진, 거창 가조 온천관광특구 조성, 미호천을 활용한 항공·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 등도 있다. 이러한 개발 공약은 총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3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19대 총선과 차별성 갖춰야

그러나 여야의 이러한 20대 총선 공약은 19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공약은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 주거 복지가 큰 기조였다. 단지, 새누리당은 임대주택 공급 분야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실제 여야는 19대 총선에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 대책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등 굵직한 개발 계획이 청년·노인층의 주거 안정 방안으로 변경된 것과 다름없는 구조다.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전월세상한제도 등은 20대 총선에서도 화두가 될 수 있지만, 집값이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와 상충되면서 표심과 직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거래 규제에 따른 반발과 제도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이나 월세 전환을 확대할 때에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재탕·삼탕 공약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약한 해외 진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19대 국회 초반인 2012년 이미 논의된 바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7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더불어 성장,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실현 등 총선 전략도 자원 마련이 불투명해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고려해 여야 지도부가 반드시 19대 국회와 차별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이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여야 모두 거짓 공약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20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2월 말까지 선거구 확정조차 결정하지 못했던 현실은 정치권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시장 거래 절벽 우려도 반드시 해법을 제시해야 한

다. 19대 총선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면, 20대 총선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유례없이 얼어붙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하우스푸어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택 거래 실종은 지역 경기는 물론 이삿짐센터, 실내 인테리어, 가구점, 도배업, 청소업 등 서민 일자리가 줄줄이 사라지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6일 대한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전직 국토부 장관 11인과 건설단체장 13인의 회동은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알린 자리로 분석된다. 당시 임인택 전 장관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침체를 우려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고, 최종찬 전 장관은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동시에 임대주택시장에 민간 업체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추병직 전 장관은 공공 택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박결호 전 장관은 양도세를 50% 감면해 거래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서승환 전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주요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해 금융 규제 완화를 건의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경기 진작을 위한 국책사업 조기 시행과 민간 투

자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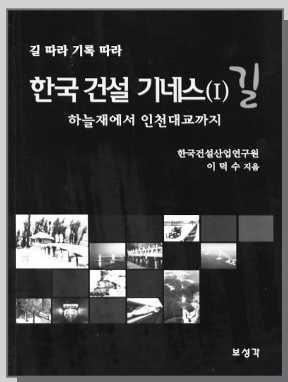
도심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기반 침하(싱크홀)와 시설물 노후화 개선 정책도 요구된다. 정부가 올해로 두 번째 추진하는 국민안전대진단 등 정책을 연계한 공약이다. 시설물 노후화 개선책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신시장 개척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고리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금융위기 등에 대한 해법, 즉 대외 변수에 대한 대응책을 당 차원에서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거는 기대는 해를 거듭해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이에 대한 화답을 할 차례다. 

도 · 서 · 안 · 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